

광주 남구 옛 보훈병원 점음의 공간 조성한다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상 선정...호남권 유일

2만7천㎡ 부지 청년주택·창업지원 사무실·영화관 등 건립

광주시 남구 보훈병원이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상에 선정됐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했다. 호남권에서는 남구 보훈병원이 유일하며, 수도권 6개, 강원·제주권 2개, 영남권 2개 등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 사업 대상지를 정했다.

국토부는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사업성, 추진체계, 입지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12월 중 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 공공건축물 또는 나대지(기존 청사 이전, 신규 청사 건립 등

이 추진 중인 곳 등) 중 교통·정주 여건이 양호하며 주택과 상업 수요가 충분해야 한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과 지자체 재정 부담 발생 시 장기 분납, 간폐율·용적률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올해부터 선도사업 물량(약 3000호 내외)을 포함해 1만호 공급에 우선 착수하고, 성과 확산을 통해 1만호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는 옛 보훈병원 2만7000㎡ 부지에 청년주택 500호를 짓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무실과 연구실, 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옛 보훈병원 주변 낡은 도심을 청년주택과 문화복합시설 등이 들어선 ‘젊음의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내년 5월까지 ‘AI 심각’ 수준 특별 방역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시와 도는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하는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각 시·군에 27개의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특별방역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복 발생,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인 나주 등 9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은 임시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고 기타 가금은 신고제 운영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21일로 연장 운영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 AI 발생위험이 높은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오리농가 24곳(51만 마리)에 대해 동절기인 11월부

터 내년 2월까지 사육을 제한하고 대신 휴업 보상을 해준다.

가금 도축장에서는 AI 검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는 출하 전 AI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사육농장의 효율적 임상 관찰 및 방역 관리를 위해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구제역 대책도 내렸다.

지난 9월까지 전국 소·염소·사슴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내년부터는 소·염소에 대해 4월과 10월 연 2회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백신 구입 및 항체 형성을 이 저조한 농가는 추가접종, 재검사, 방역 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축산식품국장은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농장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국장은 “특히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오광록기자

jwpark@kwangju.co.kr

트럼프 미 대통령 11월 방한...중·일 등 동아시아 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중국과 일본도 함께 방문하는 동아시아 순방이기도 하다.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는 북핵·미사일 대응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포트마이어스에서 돌아오던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아마도 11월에 단적으로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 한국도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초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연합)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 다자회의에 대한 참석 여부를 놓고선 “두고 보겠다”고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둘러싼 미·중 협력과 관련,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에 노력하고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번 한·중·일 방문은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답방 성격도 띠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의 방문



프린지페스티벌 ‘버블버블아시아’ 지난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프린지페스티벌 아시아마임 캠프에서 마임작가들의 합동 공연인 버블버블아시아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 프린지페스티벌은 5·18민주광장에 원형으로 인디언텐트를 세우고 텐트 앞에서 시계방향으로 진행되는 거리 라운드 테이블이란 공연 운영방식으로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순서와 일정, 논의의 안전 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한·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대책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을 집

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정치 정점으로 급부상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선 대북

제재에 대한 전폭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사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합의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5·18 기념식서 ‘임 행진곡’ 불러...이명박 정부서 불이익”

강운태 전 광주시장 밝혀

이명박 정부에서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찰 대상으로 분류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야당 단체장 사찰은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져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강 전 시장은 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느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노골화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창을 주도, 정부 눈 밖에 났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기에 그들이 규정한 좌파 인사 중용, 정부의 정책 비판 등에 나섰으니 눈에 가시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등 광주 현안에 제동을 강하게 대통령에게 태극기를 쥐어주며 자리에 서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한 것도 당시 여권을 당혹스럽게 했다”

야당 단체장 사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U대회 남북단일팀 정부 강력 반대로 무산

박 정부,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노골적 방해

며 “이후 최경환 의원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이 ‘강운태는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강 전 시장은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북한의 동의도 얻는 등 정부만 승인하면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오히려 정부가 강력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이런 정책으로 무슨 평화통일을 하느냐’며 언쟁을 벌이는 등 정부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등 광주 현안에 제동을 강하게 대통령에게 태극기를 쥐어주며 자리에 서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한 것도 당시 여권을 당혹스럽게 했다”

음을 겪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5·18 펌웨어 관련, 시가 주도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지만 원씨 등 관계자를 고소하는 한편, 광주에서 열린 통합전보당 전당대회에 참석, ‘정부가 5·18 펌웨어 수수방관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주도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강 전 시장은 “당시 보수 정권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북한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면 지금의 핵 위기 정국이 왔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있다”며 “보수 정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광주의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했고 광주 시민들의 성원은 늘 가슴 속에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년 생활임금 지급 9780원

광주 광산구 “전국 최고액”

광주시 광산구는 1일 “지난 29일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2018년 생활임금액을 지급 978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0% 높은 204만4020원으로 전국 최고액”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넘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광산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주로 청사청소, 녹지대·가로수 관리 등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하며 대략 20여명이 생활임금을 받는다. 광산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행매 광산구청장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전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010-5236-7458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